

총선 D-28

민주 호남공천 발표 임박 관전포인트

“현역 물갈이 대상 누구냐” 최대 관심

통합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현역의원 물갈이 폭, 전략공천 지역 등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천에서 탈락한 거물급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총선 구도는 막판 급변 양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11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회의에서 공천일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박재승 칼날’ 무너지나

공천 혁신 행보를 계속하면서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1차 후보 압축에 이어 55곳의 단수공천 신청지역 후보자 확정 명단을 발표하면서 혁신의 칼날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차 압축 과정에서 공심위 ‘코드 공천’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단수지역 확정 명단에는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정채성 시비에 휩싸인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단수 공천 확정 55곳중 현역 38명 정채성 시비 동학재단 관계자 배려 ‘코드 공천’ 논란 확산도

이에 대해 당의 한 인사는 “단수 신청지역의 후보자를 탈락시킬 경우 출마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대안이 없으니 공심위도 철저히 현실론에 따라 수박에 얹었다는 것이다. <코드 공천 논란 확산>=공심위가 동학재단 관계자에 대한 우호적 배려를 려자 문제 만큼이나 정채성과 자질·품성·평소 행실 등을 공천 심사의 주요 척도로 제시했다. 그러나 10일 발표된 단수공천 신청지역 55곳의 명단을 보면 공심위의 공천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다. 우선 55명 중 현역의원 38명 전원은 물론 나머지 대부분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출신이다. 지난 5년간 국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친노인사를 포함한 과거 여당 세력을 속여내지 못하고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건 대선 패배를 딛고 새로운 견제 야당으로 거듭나려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 물갈이는 얼마나

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 가운데 누가 물갈이 대상으로 선정되는지는 최대 관심 포인트다. 이르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현역의원들이 공심위의 물갈이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혹독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여론조사(50%)와 의정활동 평가(50%)가 기준이다. 의정활동에서는 본회의 출석률(20점), 상임위 출석률(20점),

여론조사·의정활동 평가 각각 50%씩 반영

의원총회(30점), 법안처리 건수(30점), 당직 경력(10점) 등이 평가항목이다. 본회의와 상임위, 의원총회 출석률 50% 미만인 경우 5점을 기본점수로 배정하고, 출석률 50%부터 100%까지 4% 간격으로 15개 구간으로 나눠 6점~20점을 주도록 했다. 법안 처리건수의 경우 ‘10건 미만’(1점)을 시작으로 10건 간격으로 20개 구간으로 촘촘히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 대표 발의의 경우 제정법안(4점), 전부 개정법안(2점), 일부 개정법안(1건) 등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당직과 국회직, 정부직 경력 평가도 종류별로 2~10점으로 세분화돼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의정활동이 미진한 일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 등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전략공천은 어디

통합민주당 당헌·당규상 전략공천은 순화규, 박상천 공동대표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합의를 거쳐 전체 지역구 245곳의 30%인 최대 73곳에 대해 가능하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20~30곳이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곳 안팎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수도권 집중 ... 호남 2~3곳 될 듯

현재 순화규, 박상천 두 공동대표의 전략공천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중 윤곽을 잡은 뒤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중반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전략공천 대상지는 서울이나 수도권, 영남 일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호남은 많아야 2~3곳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역의원이 탈락된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략공천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김홍업 의원의 공천 배제로 무주공산이 된 무안·신안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도 1곳 정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무소속 출마 누가

통합민주당의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 이에 반발하는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러시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강운태 전 의원과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등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이정원 전 의원과 국창근 전 의원 등도 무소속 출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소

만만찮은 경쟁력 본선 대접전 예고

속 출마 여부,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 한다면 광주·전남 지역 총선구도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즉 무소속 출마 러시가 현실화되면서 통합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와의 막판 피말리는 접전 양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2일 이후 현역 의원 물갈이 대상이 확정돼 윤곽이 드러나면 무소속 출마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면서 “이들의 반발 정도에 따라 무소속 출마 여부가 결정되고 본선 대결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공천배제 인사 탄원에 몸살

김홍업·박지원 이의 신청 이상수·이호웅 구제 탄원

통합민주당이 공천 재심을 요구하는 탄원과 이의 신청에 몸살을 앓고 있다. 비리 전력자 공천배제 기준에 의해 공천 탈락 위기에 놓인 인사들에 대해 당 안팎에서의 재심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1차 후보자 압축 과정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상수 전 장관의 경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선대위 고위직에 몸 담았던 김원기, 김근태, 정세균, 신기남, 이혜찬 의원과 정동영, 정대철, 이재정 전 의원이 지난 11일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당 공천심사위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다가 대선자금 불법수수 사건에 연루됐던 전력이 문제가 됐지만 당시 그가 받은 돈은 모두 선대위에 입금돼 선거자금으로 쓰였고 개인 유용이 없었다는 것. 또, 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송영길 한광원

Advertisement for 'Hwangsan Janggaje' (名山杖架祭) featuring a scenic background and a table of ticket prices for various packages. The table lists packages like 'Hwangsan Janggaje' and 'Hwangsan Janggaje' with prices ranging from 40,000 to 100,000. Contact information for '모두투어' is provided at the bottom.